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돌파구 찾나

손실보전 분담금·연료 사용기한 등 놓고 조율 9월 말 14차 민관 거버넌스 회의 예정...합의 기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16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2년째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

지문기구 성격인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가 지난 1월 출범해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최종합의안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다.

손실보전 분담금 문제와 발전소 연료 사용 승인 기간 등 두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9월 말 예정된 14차 회의에서 돌파구를 찾는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비석형 고흡연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문제는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 열병합발전설비는 발전연료인 비석형 고흡연료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SRF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SRF발전 시설 폐쇄나 100% LNG 연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SRF 열병합발전설비가 지역사회 최대 갈등사안으로 부상하면서 결국 이해 당사자인 산자부와 한국 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지난 1월 출범해 합의안 도출에 나섰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한달에 1~2차례씩 그동안 총 13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연료방식을 LNG로 전환하는 데 따른 손실보전비용과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 발전소 폐쇄로 결정 날 경우 매몰비용 부담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가 별도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범시민대책위가 '연료

사용 승인 기간 제한'을 나주시에 요구하면서 막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민들은 나주시가 SRF 연료 사용을 승인할 경우 3개월 시험가동 후에도 법적효력을 가져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나주시가 연료사용 승인을 3개월 시험가동 기간에만 한 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조건부 연료 사용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14일 "이미 법원이 나주시의 소극적인 발전소 관련 행정을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주시는 법에 따라 인허가를 결정하면 된다"며 "나주시 역시 주민들이 요구한 조건부 연료사용 승인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버넌스 위원회가 9월 말 14차 회의를 열어 발전소 시험가동을 위한 최종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여 2년여 이어온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1



코스모스가 알리는 가을 소식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듯 화창한 날씨를 보인 16일 전북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 식재된 코스모스가 청명한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가을을 알리고 있다.

6년간 광주·전남 유기동물 3만마리...5359마리 안락사

손금주 의원 "인식 전환과 강력한 단속·처벌 필요"

최근 6년여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버려진 동물은 3만마리가 넘고 이 중 5300여마리가 안락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전남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3만 510마리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41만5514마리였다.

광주는 이 기간 9295마리가 버려졌다. 연도별로는 2014년 1394마리, 2015년 1299마리, 2016년 1665마리, 2017년 1769마리, 2018년 1766마리, 올해 8월까지 1402마리다.

전남은 2만1215마리가 유기됐다. 2014년 2371마리, 2015년 2844마리, 2016년 2874마리, 2017년 3535마리, 2018년 5048마리, 올해 8월까지 4543마리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유기되는 동물들이 주인을 찾기 위해 안락사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10만3416마리에 달했다.

광주는 6년 동안 1076마리, 전남은 4283마리 등 5359마리가 안락사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 의원은 "이 숫자는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되는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석연휴 구조활동 전년 대비 504건 늘어

전남도소방본부

전남도소방본부가 16일까지 6일간의 추석연휴 전후 특별 경계근무 결과 화재 18건, 구조 1004건, 구급 1293건의 활동을 펼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연휴와 비교해 화재는 5건, 구급은 1건 줄었고, 구조활동은 504건 늘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조활동이 늘어난 것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아 별집 제거 출동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반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야 화재 예방 순찰활동과 함께 주요 시설 소방력 전진배치를 중점 실시했다.



이슈 판결

서울광장 무단 1인시위에 변상금 부과...대법 "적법하다"

1심 "위법"→2심 "정당"→대법 "변상금 산정 다시"

낮엔 서울광장에서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두고 밤엔 서울시청사 부지에 자전거를 옮겨 텐트를 설치한 뒤 취침하는 식으로 한 1인 시위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변상금 산정 기준은 '실제 무단점유 면적'이 돼야 해 서울광장 사용료상의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삼은 항소심 판단엔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씨가 서울시청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 행위는 서울광장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물건을 비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서울광장을 통행로로 지나가거나 여가선용 목적으로 단순히 머무르는 형태의 일반적 사용과도 구별된다"며 "적법한 점포·시위라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이르지 않거나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변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해선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최소 사용면적 500㎡가 아니라 주씨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2015년 7월 9일부터 낮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 놓고, 밤엔 서울시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취침하며 1인 시위를 지속했다. 이에 서울시가 2017년 5월과 7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며 변상금 67만 원과 225만 원을 부과하자 주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광장은 민주화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을 위한 역사적 무대였다"며 "서울광장 1인시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건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이라며 주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주씨 행위는 서울광장 일부 및 서울시청사 부지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에요... 자태치로구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급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아가발견, 자활치료 중인 민허군